

IIRI Online Series

미국과 대만 관계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한국에의 시사점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2023. 4. 27

미국과 대만 관계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한국에의 시사점



주 재 우 |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만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인사 결과를 보고, 미국의 각계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진핑 주석이 2027년에 자신의 4연임의 정당성을 대만 통일로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대만 방어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은 지속되어 왔다. 2021년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 네 차례나 파병과 개입 의지를 밝혔다. 미 의회도 미국의 대만 방어 의사와 의지를 정당화하는 법안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기존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즉,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다.

미·중에게 대만의 전략적 의미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미·중 양국에게 서로 같은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전략적 변수로서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는 대만해협이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협 중 하나라는 것으로, 일본의 쿠릴해협, 우리의 대한해협, 필리핀해협 등과 함께 중시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마주하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이들 해협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를 방증한다. 역으로 이들 통로를 차단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는 자칫 호수로 전략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사시 이들 항로의 차단을 돌파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통일 또는 점령 등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바다는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더 나아가 일본 서해바다 상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우위를 점하게 된다.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이 자유로운 항해권을 빼앗길 경우,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위협 증가 또한 자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제1도련선이 중국에게 최후의 방어선이고, 미국에게는 최전선 방어선이라는 전략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도련선 방어에 실패하면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해협에서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 인도양까지 내줄 수 있는 결과를 면할 수 없다. 역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건잡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제1도련선은 미·중이 서로를 억제하는 데 전략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1도련선의 관건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방어와 방위 능력은 미국에게 지극히 중대하다.

대만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지원 노력

‘인태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은 대만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했다. 대만과의 군사·외교적 교류를 정당화해야 하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과 관련 2017년부터 미

국이 통과시킨 대만 관련 법안은 필연적이었다. 2017년 미국은 자국군함의 대만정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2018년 3월의 ‘대만여행법’, 2020년의 ‘대만관계강화법’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국 가입 승인법 등이 연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밖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 의회는 약 십여 개의 법안을 소개했다. 이중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만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작년 12월 6일에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고스란히 담겼다. 미국의 대만 방위 및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조항도 조목조목 담아냈다.

특히 동 법안의 세부 조항으로 명기된 ‘대만 회복성 제고 법안(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로 인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정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미 의회와 국방 당국의 결의를 담고 있다. 즉, 중국의 스마트파워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방편으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영향력 발휘와 정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Sec. 5513),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는 태스크포스(Sec. 5514)와 중국 센서십(언론 검열)과 행동 그룹(Sec. 5515)의 설립 내용 등이 담겨있다. 즉, 대만이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의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때 방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미 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대만의 방위와 방어 능력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 전략을 두 마리의 토끼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에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적 명확성’의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다른 한 편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경우, 대만이 이를 독립에 대한 지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다. 중국의 무력 억지력의 동원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즉 내정불간섭을 지지하면서 대만의 무력통일을 방관하는 것은 역내에서의 미국 동맹체제에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해서 미국의 대만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미국이 대만해협 지역을 수호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며 우리도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중국이 대만해협을 장악하면, 우리 바다의 주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에 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제1열도선 방어선에 포함된 우리의 지리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미동맹이 중국의 방어선 내에서 억지력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대만해협 문제에서도 한·미간의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사실에 어느 정도 수긍할 필요가 있다.

/끝/

저자 소개

주재우 교수는 미국 웨슬리언(Wesleyan)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연구원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2003년부터 경희대 중국어학과에 재직 중으로, 2021년 4월부터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중국연구센터장, 2022년부터 한중사회과학회 회장, 2023년부터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중국외교, 미·중관계, 북·중관계와 다자안보 등이다. 저서로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6.25전쟁에서 사드갈등까지(2017)』,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2018)』,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2022)』 등이 있다. (Email: jwc@khu.ac.kr)